

제74차 여성정책포럼

제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 2012년 4월 30일(월) 15:00~17:00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신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74차 여성정책포럼

제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과제

일시 | 2012년 4월 30일(월) 15:00~17:00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관 2층 국제회의장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신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제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9대 총선 결과 여성당선자는 총 47명으로 15.7%를 차지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들은 총선 시작과 함께 ‘여성 공천’을 개혁 화두로 올리며 15~30%까지 지역구 여성할당을 약속한 바 있었으나, 당 지도부의 공약이 무산된 가운데 얻은 결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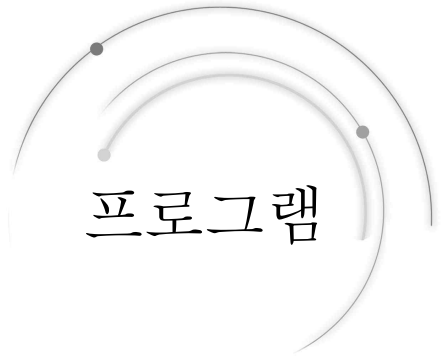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전략공천과 경선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지역구 여성 공천 결과는 7%에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천심사과정, 경선과정과 연계하여 일련의 선거과정을 평가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의 향후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고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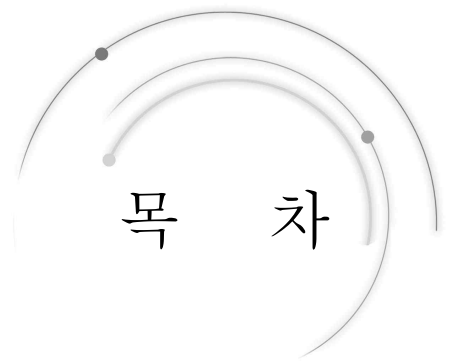
2012년 4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 숙



프로그램

시 간	구 분	세 부 내 용
14:30~15:00	등 록	
15:00~15:10	인 사 말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5:10~15:30	주제발표	사 회 : 유희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제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15:30~16:40	토 론	이은재 (새누리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승희 (민주통합당 여성위원장/19대 민주통합당 서울 성북구 갑 당선자) 신계용 (새누리당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청와대 행정관)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은경 (여성신문사 편집위원)
16:40~17:00	종 합 토 론	
17:00	폐 회	



주제발표

□ 제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1...

김 원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토 론

이 은 재 (새누리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 승 희 (민주통합당 여성위원장/19대 민주통합당 서울 성북구 갑 당선자)

신 계 용 (새누리당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청와대 행정관)

김 정 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 경 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 은 경 (여성신문사 편집위원)

주제발표

제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 참여 현황과 향후과제

김 원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혜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I. 서론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2010년 100점 기준 62.6점으로 나타난다. 가족, 복지, 보건,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 등 8개 부문을 대표하는 20개 지표값에 가중치를 반영해 산출한 결과이다. 부문별로는 ‘보건’이 89.1점으로 성차별이 가장 적었고, ‘의사결정’이 19.2점으로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정치분야, 특히 국회의원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의사결정직에는 여성대표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18대 총선결과 여성의원 비율은 13.7%로 전체 의원 수 299명 중 41명에 불과하였다. 이후 18대 국회 말기까지 정당 비례대표 순위자의 승계로 45명까지 증가하여 15.1%까지 차지하였으나, IPU(국제의원연맹)회원국의 평균 19.1%에도 미치지 못하여, 국제비교 지표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척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19대 총선을 기하여 여성 정치 참여율은 15.7%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여성 정치참여 목표비율 30%를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먼 길에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19대 총선이 여성 정치 참여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향후과제에 대하여 논의의 실마리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여성 정치 참여 증진 개입 포인트

여성 정치참여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¹⁾

□ 정당 내부구조

- 법률체계, 운영지침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
- 정당 고위층,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조치 실행
- 여성관련 조직/부서를 정당 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배치
- 전당대회에서의 여성의 참여에 대한 목표 설정

1) UNDP(2012), A Guidebook to Promot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 정책개발시 양성평등적 관점 고려

□ 선거 전

▷ 후보자 발굴

- 여성의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정당 지도자들간의 합의도출
- 자발적 여성후보자 할당제를 채택하고 이를 후보자 선출원칙으로 공식화함
- 선거사무국 또는 정당지도자들은 선거일정에 따라 여성후보자 할당제 실행
- 정당명부 중 유리한 위치 또는 당선가능한/안전한 선거구에 여성후보자 배치
- 시민단체, 여성후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와의 협력
- 남성후보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하고 이들로부터 지원을 얻어냄

▷ 기금모금과 캠페인

- 여성후보자에게 초기자금 조성, 캠페인, 인지도 구축 방법 교육
- 에밀리 리스트(Emily's List,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치후원금을 모집하는 풀뿌리 유권자 조직), 위시 리스트(Wish List)와 같은 여성후보자를 위한 기금조성 네트워크의 수립, 또는 활용
- 정당 내부기금 조성 또는 여성후보자에게 보조금 제공
- 후보자 지명/초기 경선 자금에 대한 한도 설정을 고려
- 정당자금(적용이 가능한 공적자금 포함)의 일정부분을 여성후보자와 여성후보자를 위한 교육에 쓰도록 배정
- 국제기구,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 선거 중

▷ 선거캠페인 기간

- 여성후보자의 캠페인 역량구축, 선거경험이 없는 후보자에 대한 멘토링
- 선거캠페인, 언론매체 보도 시 여성이 눈에 띄도록 함
- 정당의 성명서 발표시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

- 여성유권자의 등록과 투표를 독려 ;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성별에 맞는 성인 지적 유권자정보 제공
- 캠페인 기간 동안 여성후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잠재적 폭력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정당지지자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함
- 시민단체, 여성후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와의 협력

▷ 선거당일

- 투표소에서 여성이 정당의 주요 일원으로 인식되도록 함
- 모니터링시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도록 하고 여성후보자의 안전을 보장
- 여성이 선거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 제공

□ 선거 후

▷ 선출된 여성후보자

- 정당 내에서의 양성평등 수준 평가, 젠더행동계획 개발
- 선출된 여성후보자의 능력배양, 입법에 관한 기량 강화
- 정치단체, 특히 의회 내에서의 성인지적 정치개혁 증진
- 정당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여성참여 확대 ; 정당 정책의 성주류화 보장
- 2개 이상의 정당이 참여하는 단체의 설립을 장려하고 단체의 운영을 지원
- 정당 구성원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고, 남성 의원과 협력

III. 역대 여성 정치참여 현황 및 여성정치 할당제 노력

1. 역대 여성 정치참여 현황

2008년도 18대 총선 결과 여성당선자 비율은 13.7%였다. 그 이후 비례대표승계로 2011년 현재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15.1%(승계 포함 45명)까지 상승하였다.

2012년 4월 11일 19대 총선 결과는 여성당선자가 전체 당선자 300명 중 47명으로 여성비율이 15.7%를 차지한다. 역대 국회 여성대표성 비율 및 19대 총선결과 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1> 여성 국회의원 비율

대(연도)	의원 정수	남성의원수(명)	여성의원수(%)
1(1948)	200	199	1(0.5)
2(1950)	210	208	2(1.0)
3(1954)	203	202	1(0.5)
4(1958)	233	230	3(1.3)
5(1960)	291	290	1(0.3)
6(1963)	175	173	2(1.1)
7(1967)	175	172	3(1.7)
8(1971)	204	199	5(2.5)
9(1973)	292	275	17(5.8)
10(1978)	231	223	8(3.5)
11(1981)	276	267	9(3.3)
12(1985)	276	268	8(2.9)
13(1988)	299	293	6(2.0)
14(1992)	299	291	8(2.7)
15(1996)	299	290	9(3.0)
16(2000)	273	257	16(5.9)
17(2004)	299	260	39(13.0)
18(2008)	299	258	41(13.7)
19(2012)	300	253	47(15.7)

* 출처: 각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결과 총람.

2. 여성 정치할당제 시행경과

□ 2000년

- 공직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2000년 2월 16일 법률 제6269호로 개정된 정당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함.
- 정당이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자와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회의의원 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함.

- 그러나,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천한 정당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강제하는 정도가 약하였음.

□ 2002년

- 정당은 비례대표 전국 선거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비례대표선거구 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여성할당제의 적용범위를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선거까지 확대하였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원선거에서는 50%로 강화하면서 후보자 2인마다 여성을 1인 포함하도록 함.
- 여성할당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시 여성할당제를 위반하면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후보자 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경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같은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을 100분의 50이상을 추천하도록 강화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도의회 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같은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더불어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할당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무효로 함.

□ 2005년

- 이 시기에 정당법에서 규정하던 여성할당제를 공직선거법으로 옮겨 규정하게 됨.
- 이때부터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함.

□ 2006년

- 이때부터 여성추천보조금 적용 대상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시도 의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로 확대하기 시작함.

□ 현행제도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여성할당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이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강제규정을 갖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서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게는 국고보조금을 더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은 지역

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여성들이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만약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인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않으면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가 됨.
- 이와 비교하여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강제조항은 없음.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여성 할당제를 강제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제52조 제1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 100분의 50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다는 것과 순위를 위반하는 후보자 등록은 등록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모두 여성들을 100분의 50이상 추천하고 매 홀수마다 여성으로 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만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허점을 가지고 있음

▷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

-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2010.1.25.시행),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7조 5)’고 규정하고, 제52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무효하도록 하고 있음.
- 2012년 4.11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성계는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요구하였고, 각 당 여성지도부는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에 새누리당은 ‘여성공천 30%권장’, 민주통합당은 당규 제정 시에 ‘여성 공천할당 15%강제’를 공표하였음. 2012년 4.11 선거는 지역구여성공천 할당이라는 첫걸음을 뗀 해임. 그러나, 여성공천 30%를 현실화하는 데 실패함.

3. 19대 총선 여성후보자, 당선자 현황 및 장애요인

- 19대 총선에서 당선자는 유례없이 300명이다. 이 중 여성당선자는 47명으로 15.7%를 차지하였다. 총선 실시결과 ‘여성 정치참여 15%를 넘긴 해’로 기록될 일이지는 하나, 아직도 30%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 4.11 총선 지역구 여성후보자는 전체 902명 중 63명으로 7.0%를 차지하였다. 이는 18대 총선 시 여성후보자 비율 11.8%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 총선 정국에서 개혁공천의 상징적 화두로 ‘여성 지역구 공천’을 내세웠다. 지역구 여성공천자 수를 보면, 새누리당은 지역구 전체 공천자 230명 가운데 여성은 16명으로 7.0%이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209명 중 21명을 여성으로 공천하였다. 지역구의 15%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하여야 한다는 당규를 제정하였지만, 스스로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하였는데, 2개 정당에 11억 3천여만원을 지급하였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에 16명을 추천하여 전체

지역구 총수 기준(246개 지역구)의 6.5%를 차지하였으며, 민주통합당은 21명을 추천하여 전체지역구 총수 기준 8.5%이다. 새누리당은 7억4천여만원, 민주통합당은 3억8천여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다른 정당은 여성후보자가 전국 지역구총수의 5%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지역구 여성공천이 초라하게 끝난 이유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향후 과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당지도부의 의지부족, 계파정치 관행, 경선에서의 열세, 인력풀 문제 등 요인은 대략 몇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여성 정치 참여 증진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당들은 선거전에 전략공천지역을 정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한계점을 들 수 있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경우 수도권지역의 경우 열세를 면치 못하였으나, 서울의 강남이나 경상지역의 당 우세지역이었던 그 동안 열성을 보여왔던 여성후보를 공천을 하지 못하였던 점이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남고 있다.
- 지역구 여성당선자 현황을 보면, 새누리당 후보자는 서울, 부산, 경기, 대구, 대전에서 공천을 받고, 후보자 등록을 하여 서울, 부산, 대구에서만 당선하였다. 민주통합당 후보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 경북 등에서 후보자가 있었다. 당선자는 서울에서 7명이 나왔고, 광주 1명, 경기 4명, 전북에서 1명이 당선하였다. 통합진보당은 지역구에서 8명이 출마하여 경기도에서만 2명이 당선하였다.
- 민주통합당 13명 당선이라는 쾌거를 올린 것은 지역구 여성공천 15%를 의무화하고, 여성공천에 적극적이었던 정당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여성공천 30% 노력을 표방하였으나, 정당 지도부의 계파정치, 전략공천, 후보자 빈곤 등의 이유를 들어 여성공천율은 7.0%에 머물고, 당선자는 4명밖에 되지 않았다.

<표 2> 19대 총선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지역별 분포

정당 지역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자유 선진당		통합 진보당		정통 민주당		진보 신당		국민 생각		국민 행복당		무소속		전체	
	후 보	당 선	후 보	당 선	후 보	당 선	후 보	당 선	후 보	당 선	후 보	당 선	후 보	당 선	후 보	당 선	후 보	당 선	후 보	당 선
서울	5	2	9	7	0	0	0	0	0	0	1	0	1	0	1	0	1	0	18	9
부산	2	1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4	1
대구	1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
인천	0	0	1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2	0
광주	0	0	1	1	0	0	2	0	1	0	0	0	0	0	0	0	0	0	4	1
대전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2	0
울산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2	0
경기	7	0	4	4	0	0	2	2	0	0	1	0	0	0	0	0	3	0	17	6
강원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충북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충남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0
전북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1	0	2	1
전남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2	0
경북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2	0
경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제주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체 여성	16	4	21	13	2	0	8	2	3	0	4	0	1	0	1	0	7	0	63	19
정당 전체 (%)	230 (7.0)	127 (3.1)	209 (10.0)	106 (12.3)	50 (4.0)	3 (0.0)	51 (15.7)	7 (28.6)	30 (10.0)	0 (0.0)	23 (17.4)	0 (0.0)	20 (5.0)	0 (0.0)	22 (4.5)	0 (0.0)	241 (29)	3 (0.0)	902 (7.0)	246 (7.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결과 분석, 2012.4.12. /후보자 등록시점에서 여성후보는 66명 이었으나, 선거시점에서는 3인이 사퇴하여 63명임.

- 지역구 당선자 현황을 보면, 지역구 여성당선자는 19명으로 246 지역구의 7.7%를 차지한다. 새누리당은 박인숙(송파구 갑), 김을동(송파구 병), 김희정(부산 연제구), 권은희(대구 북구 갑)후보자가 당선하였고, 민주통합당의 당선자는 추미애(광진구 을), 서영교(중랑구 갑), 유승희(성북구 갑), 인재근(도봉구 갑), 이미경(은평구 갑), 박영선(구로구 을), 김영주(영등포구 갑),

박혜자(광주 서구 갑), 김상희(부천시 소사구), 이언주(광명시 을), 유은혜(고양시 일산동구), 김현미(고양시 일산서구), 전정희(전북 익산시 을)후보자가 당선하였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통합민주당은 경기도에서 김미희(성남시 중원구), 심상정(고양시 덕양구 갑)후보자가 당선하였다. 지역구에서 여성당선자는 총 19명이다.

<표 3> 지역구 여성후보 및 당선자

소속 정당	후보 및 지역구	당선 여부	소속 정당	후보 및 지역구	당선 여부
새누리당	김정(중랑구 갑)		자유선진당	강정희(제주시 을)	
	유경희(도봉구 갑)			홍표근(충남부여군청양군)	
	박인숙(송파구 갑)	○		김성은(종로구)	
	김을동(송파구 병)	○	통합진보당	이지애(경북 구미시 을)	
	정옥임(강동구 을)			이은주(울산 동구)	
	김희정(부산 연제구)	○		황차은(광주 광산구 을)	
	손수조(부산 사상구)			김관희(광주 동구)	
	권은희(대구 북구 갑)	○		김미희(성남시 중원구)	○
	최연혜(대전 서구 을)			심상정(고양시 덕양구 갑)	○
	배은희(수원시 을)			전종덕(전남 나주시화순군)	
	손숙미(부천시 원미구 을)			유현주(전남 광양시구례군)	
	전재희(광명시 을)		전통민주당	박선희(인천 계양구 갑)	
	박선희(안산시 상록구 갑)			이점자(광주 서구 을)	
	박순자(안산시 단원구 을)			서진희(대전 서구 을)	
	김영선(고양시 일산 서구)		진보신당	이향희(울산 중구)	
	송영선(남양주시 갑)			김영희(부산 영도구)	
				심재옥(구로구 을)	
민주통합당	추미애(광진구 을)	○	국민생각	김선아(고양시 덕양구 을)	
	서영교(중랑구 갑)	○		주준희(노원구 병)	
	유승희(성북구 갑)	○			
	인재근(도봉구 갑)	○	국민행복당	이희정(용산구)	
	이미경(은평구 갑)	○	기독교당	황옥성(고령군성주군칠곡군)	
	차영(양천구 갑)		녹색당	박혜령(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소속 정당	후보 및 지역구	당선 여부	소속 정당	후보 및 지역구	당선 여부
	박영선(구로구 을)	○	무소속	이인숙(평택시 을)	
	김영주(영등포구 갑)	○		서현진(마포구 을)	
	임지아(서초구 을)			박승천용(용인시 갑)	
	장향숙(부산 금정구)			정미경(수원시 을)	
	윤선진(대구 서구)			조배숙(전북 익산시 을)	
	안귀옥(인천 남구 을)			박근령(보은군옥천군영동군)	
	박혜자(광주 서구 갑)	○		정막선(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김상희(부천시 소사구)	○			
	이언주(광명시 을)	○			
	유은혜(고양시 일산동구)	○			
	김현미(고양시 일산서구)	○			
	김진희(원주시 갑)				
	김선화(충남 아산시)				
	전정희(전북 익산시 을)	○			
	배영애(경북 김천시)				

* “○”표시는 당선자임.

- 지역구 여성당선자는 대부분 선거구내 투표자의 40%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였다. 특히, 대구 북구 갑의 권은희 당선자, 서울 구로구 을의 박영선 의원(현직의원)은 유효투표의 60%를 넘는 지지를 획득하였다.

<표 4> 지역구 여성당선자의 득표

정당명	당선자	지역선거구	득표수 (선거구내 득표율)	2위 득표수
새누리당	박인숙	송파구 갑	51,306(52.75)	42,604(43.80)
	김을동	송파구 을	59,664(51.37)	53,840(46.36)
	김희정	부산 연제구	47,935(48.99)	30,131(30.79)
	권은희	대구 북구 갑	37,201(60.15)	11,772(19.03)
민주통합당	추미애	서울 광진구 을	45,980(55.19)	32,456(38.95)
	유승희	서울 성북구 갑	54,057(51.26)	47,234(44.79)

정당명	당선자	지역선거구	득표수 (선거구내 득표율)	2위 득표수
	이미경	서울 은평구 갑	42,672(49.05)	36,071(41.46)
	박영선	서울 구로구 을	54,902(61.94)	31,063(35.05)
	서영교	서울 중랑구 갑	33,891(40.91)	19,647(23.71)
	인재근	서울 도봉구 갑	45,682(58.46)	31,361(40.13)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갑	52,232(52.86)	45,161(45.70)
	박혜자	광주 서구 갑	25,598(42.11)	12,234(19.96)
	김상희	경기부천 소사구	51,300(51.62)	44,306(44.58)
	이언주	경기광명시 을	43,441(50.09)	40,028(46.15)
	유은혜	경기고양일산동구	60,236(51.59)	53,813(46.09)
	김현미	경기고양일산서구	63,432(50.64)	57,738(46.09)
	전정희	전북익산시 을	25,797(39.52)	18,511(28.35)
통합진보당	심상정	경기고양덕양 갑	43,928(49.37)	43,758(49.18)
	김미희	경기성남시중원구	46,062(46.77)	45,408(46.11)

- 비례대표 당선자는 정당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한 결과 새누리당 득표율 42.51%로 25명, 민주통합당은 득표율 36.70%로 21명, 자유선진당은 득표율 3.49%로 2명, 통합진보당은 득표율 9.95%로 6명이 당선하였다. 이 중 여성당선자는 각 정당이 할수번호에 여성을 배정하여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자유선진당 1명, 통합진보당은 6명 중 3명으로 여성당선자는 총 28명으로 비례대표 당선자의 51.85%를 차지한다.

<표 5> 4.11총선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의 정당별 분포

정당명	전체후보자수	여성후보자수	전체당선자수	여성당선자수
새누리당	44	21	25	13
민주통합당	38	18	21	11
자유선진당	16	6	2	1
통합진보당	20	10	6	3
창조한국당	4	2	0	0
국민생각	7	3	0	0
국민당	7	0	0	0
친박연합	4	2	0	0
국민행복당	6	3	0	0
기독당	8	2	0	0
녹색당	3	2	0	0
대한국당	3	0	0	0
미래연합	2	0	0	0
불교연합당	4	0	0	0
정통민주당	7	4	0	0
진보신당	7	4	0	0
청년당	4	2	0	0
한국기독당	2	0	0	0
한국문화예술당	1	0	0	0
한나라당	1	0	0	0
합 계	188명	79명(42.02%)	54명	28명(51.85%)

비례대표 여성당선자는 새누리당 소속의 민병주, 윤명희, 강은희, 신의진, 이에리사, 박근혜, 김현숙, 이자스민, 류지영, 민현주, 손인춘, 현영희, 신경림 당선자의 13명이고, 민주통합당 소속의 전순옥, 은수미, 진선미, 배재정, 남인순, 한정애, 장하나, 한명숙, 김현, 최민희, 임수경 당선자의 11명, 그리고 자유선진당 문정림 당선자, 통합진보당의 윤금숙, 김재연, 김제남 당선자이다.

<표 6> 정당별 전국구 비례대표제 여성후보 및 당선자

소속정당	후보 및 (공천순위)	당선 여부	소속정당	후보 및 (공천순위)	당선 여부
새누리당	민병주(1)	○		송옥주(31)	
	윤명희(3)	○		정지영(33)	
	강은희(5)	○		김재수(35)	
	신의진(7)	○	자유선진당	문정림(1)	○
	이에리사(9)	○		황인자(3)	
	박근혜(11)	○		송아영(5)	
	김현숙(13)	○		정영순(7)	
	이자스민(15)	○		이명숙(9)	
	류지영(17)	○		함영이(11)	
	민현주(19)	○	통합진보당	윤금숙(1)	○
	손인춘(21)	○		김재연(3)	○
	현영희(23)	○		김제남(5)	○
	신경림(25)	○		조윤숙(7)	
	박윤옥(27)			오옥만(9)	
	장정은(29)			나순자(11)	
	정윤숙(31)			유난실(13)	
	서미경(33)			황선(15)	
	한정혜(35)			박영희(17)	
	정수경(37)			김수진(19)	
	최유수(39)		창조한국당	윤지영(1)	
	신향숙(41)			이지영(4)	
민주통합당	전순옥(1)	○	국민생각	전여옥(1)	
	은수미(3)	○		박재숙(3)	
	진선미(5)	○		엄향희(6)	
	배재정(7)	○	친박연합	전유리(2)	
	남인순(9)	○		윤영희(3)	
	한정애(11)	○	국민행복당	한영애(1)	
	장하나(13)	○		손점순(3)	
	한명숙(15)	○		박희자(5)	

소속정당	후보 및 (공천순위)	당선 여부	소속정당	후보 및 (공천순위)	당선 여부
	김현(17)	○	기독교당	이상순(3)	
	최민희(19)	○		최숙자(8)	
	임수경(21)	○	녹색당	이유진(1)	
	문명순(23)			장정화(3)	
	조경애(25)		전통민주당	이희자(3)	
	정은혜(27)			최미란(4)	
	김경자(29)			이유원(6)	
	이미경(7)				
진보신당	김순자(1)				
	이명희(3)				
	장혜옥(5)				
	박은지(7)				
청년당	강연재(1)				
	강주희(3)				

* “○”표시는 당선자임.

IV. 실질적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과제

1.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성과 소개²⁾

2011년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 의원 비율이 16대 5.9%에서 17대 13.0%, 18대 13.7%(2011년 10월 현재 의원 승계 포함 15.1%)로 증가한 상황에서 16대에서 18대까지 여성 의원 증가에 따른 의사결정과정과 의정활동에서의 변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여성의원의 증가가 의회내 의사결정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남녀의원간 법안발의 및 심의과정 측면에서의 의정활동에서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여성관련 의제는 지속적으로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지, 남녀의원들의 성인지성에도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여성의원의 증가는

2) 김원홍, 김복태, 차인순, 전선영(2011),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 분석: IPU 국회 성 인지성 조사를 기반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주었다. 실제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의원의 증가는 국회 상임위 등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대와 영향력 증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16대 여성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임위 수가 5개였다가, 17대에 3개, 그리고 18대에는 0개로 줄었다. 이는 여성 의원의 수적 증대가 정책결정 과정에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로 활동한 여성의원의 수가 총선 직후 원구성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여성 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6대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5.9%(각 1명씩), 17대 전반기에 17.6%(3명), 후반기 11.8%(2명) 그리고 18대 전반기에 18.8%(3명)로 다소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여성 의원들의 간사활동을 살펴보면, 16대에는 6명, 17대에는 7명 그리고 18대 전반기에 5명의 여성 의원이 간사활동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위원회 운영에서의 여성 리더십 역량 증가 기회의 확대와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둘째, 여성 의원의 수적 증가와 함께 여성 의원의 의정활동도 양적·질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먼저 법률안 대표발의 비율이 16대, 17대, 18대 모두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여성 의원이 16대 5.9%에서 13%로 증가한 17대 전반기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성 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비율은 여성 의원의 대표율을 넘어서고 있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7대 전반기가 대표율 대비 가장 높은 발의율을 보여주었다. 17대 전반기의 경우 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건수는 2,484건(78.9%)으로 남성 의원 비율 87.0%에 비하여 다소 낮으며, 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의 경우 666건(21.1%)으로 여성 의원 비율 13.0%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16대 대비 17대 국회 여성 의원의 증가율은 7.1%p 인데 법률안 발의 증가율은 14.2%p 증가하여 17대 여성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6대에 비해 17대에 여성 의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여성 의원들이 극소수였던 상황보다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3배 이상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여성 의원들은 복지,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며, 최근 들어와 여성 의원의 증가에 따라 재정경제, 교육, 국토해양분야의 각 소관위원회의 주제에 관한 법안발의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 또한 여성 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성의 다양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셋째,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로 인하여 여성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여성관련 의제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다양한 영역의 법안에도 관심을 보다 기울일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 실제, 여성의원 발의 전체 법안 대비 여성관련 법안 발의 비율은 16대 전반기 25.5%, 17대 전반기 11.9%, 18대 전반기 6.9%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원 발의한 평균 법률안의 경우 16대 전반기 3.2건, 17대 전반기 17.1건, 18대 전반기 24.5건으로 증가하였고, 1인당 평균 여성관련 발의 건수도 16대 전반기 0.8건, 17대 전반기 2.0건, 18대 전반기 1.7건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여성의원들의 수적 증가가 여성관련 법률안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양한 의제들을 마련하는데 기울일 힘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보다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는 여성의제 관련 가이드 라인 제공 및 모니터링 실시, 여성의제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 같은 정책지원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 의원의 증가가 남성 의원의 성 인지적 의정활동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16대부터 18대까지 1인당 평균 여성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여성 의원의 경우 16대 전반기에 0.8건(전체 13건), 17대 전반기 2.0건(전체 79건), 18대 전반기 1.7건(전체 69건)이고, 남성 의원의 경우 16대 전반기에 0.04건(전체 10건), 17대 전반기 0.2건(전체 53건), 18대 전반기 0.4건(전체 111건)으로 남성의원의 1인당 평균 여성관련 법안 발의 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 의원 증가 영향으로 남성 의원의 남녀평등의식이 제고되고 성 인지적 관점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보다 여성대표성과 일자리 창출 등 권익과 관련된 문제에 높은 수준의 민감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섯째, 여성의원의 증가는 우리나라 국회가 성 인지적 조직문화로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 인지적 행동변화가 가장 높은 항목은 성희롱적 언어 및 태도를 보였고, 야간회의 시간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 가족친화적인 국회 만들기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여성의원보다 남성의원들이 국회의 성 인지적 조직문화를 더 높이 평가한 것은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규범성 인식 변화도 고무적이었다는데, 향후 국회에서 여성의 참여확대가 요구된다.

2.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가. 지역구 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 정기 공직선거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30%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의무제로 개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6,17,18대 국회를 비교하여 볼 때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의원들의 숫적 증가와 함께 17대때 여성정책의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여성관련 법제가 신설, 발전됨과 함께 여성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보다 중요한 점은 여성의원이 16명이었던 16대 국회에 비하여 17대 국회에서는 41명으로 여성국회의원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여성친화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스웨덴의 경우도 여성의원들이 증가되면서 여성관련 법안의 발의 및 제정이 늘었고, 여성 특유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 여성공천비율은 새누리당 7.0%, 민주통합당 10%로 나타났다. 이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 노력사항으로 되어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후보 추천 30%를 의무사항으로 전환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번 19대 총선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구 30% 여성후보 할당제가 법제화 되었다면, 여론에서 보여주었던 여성의원 경력단절의 문제, 전략공천의 문제, 경선제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2) 12.19 보궐 선거에 여성후보 100% 공천 의무화 노력

그간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풍토상 선거문화의 과열현상으로 정기선거에서 여성들이 공천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보궐선거의 경우 대부분 관련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자가 탈락되는 것으로 비교적 청렴도가 높은 여성에게 배려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요 정당들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여성후보 전략 공천 확대
앞에서 보았듯이 19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의 경우 경기도나 수도권권의 경우 여성후보를 전략 공천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각 당이 유리한 전국적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과 같이 최소 여당 내지 제1, 2 야당의 경우 당차원에서의 우세 지역(예; 새누리당은 경상권, 민주통합당은 호남권 등)에 여성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

19대 총선에서는 정당 비례대표국회의원은 300명 중 54명으로 18%를 차지하였다. 그간 적용해온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의 경우 국회는 전체 299명중 선출직 245명, 비례 54명(18.1%)으로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적어도 국회의석수 중 30%는 비례대표의석으로 할당하여 비례할당 50%를 통해, 전체적으로 여성의원 비율이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 여성추천보조금 확대를 통한 인센티브 강화

19대 총선을 치르면서 중앙선관위는 지역선거구 총수의 6.5%, 8.5%를 여성으로 추천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각각 7억4천여만원과 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였다. 여타 정당은 여성후보자가 전국 지역구총수의 5%에 미치지 못해 여성추천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현재 적용되는 보조금 제도에 더하여 ‘여성공천 30%할당제’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별 정당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여성공천 30%를 지키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국가 의지가 실행되도록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을 5배이상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액된 여성추천보조금을 수령한 정당은 여성후보자가 당선하도록 훈련비, 홍보비 등의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정당의 여성정치인후보자 양성 지원체계 구축

○ 정당별 여성정치인 육성 및 발굴 시스템 구축

- 정당이 자체적으로 신인을 발굴하고 신인이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는 지

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방의회 여성후보 지역구 개척·안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마. 여성친화적 공천시스템으로의 개혁

- 공천심사위원회에 50%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 여성친화적 공천심사기준 표준안 마련

바. 주요 당직 여성할당제 도입

- 정당들은 ‘주요 당직자에 최소한 30%이상 여성을 포함’하는 정책을 의무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 당직자로 정당에 기여하는 바를 확장시킴으로써 여성의 정당공천 기회를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당이 여성공천 후보자를 물색하는 중에도 지원자 및 적임자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터이므로 정당에서 당직자로 활동, 훈련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 정당은 풀뿌리 단계에서 여성당원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지도부는 여성을 주요 당직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주요 당직에 여성이 30%이상 임명됨으로써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정당 운영에 깊이 개입함은 물론 여성권익향상에도 기여하는 바를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사. 여성계와 연대를 통한 후보 발굴 및 선거지원 강화

정당들은 평시에 전·현직 여성국회의원, 전·현직 여성지방의회의원, 여성단체장, 여성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재풀을 구성하고, 선거시에는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후보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민정(2009), “18대 총선에 나타난 여성정치인의 층원”, 『사회과학연구』, 17(1): 50-82.
- 김원홍, 김민정, 이현출, 김혜영(2003),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 김복태, 차인순, 전선영(2011), 「여성 국회의원 증가에 따른 국회 성 인지성 변화 분석: IPU 국회 성 인지성 조사를 기반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원홍, 윤덕경, 김은경, 이현출, 최정원, Aie-Rie Lee, Kazuki Iwanaga(2006), 「17대 남녀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차분석 및 성인지성 확대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미간행).
- 오미연, 김기정, 김민정(2005), “한국정당의 여성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 한국의 여성정치”, 『한국정치학회보』, 39(2): 369-39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UNDP(2012), A Guidebook to Promot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토 론 문

이은재 (새누리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유승희 (민주통합당 여성위원장/19대 민주통합당 서울 성북구 갑 당선자)

신계용 (새누리당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청와대 행정관)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은경 (여성신문사 편집위원)





제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과제

토 론 문

이은재 (새누리당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제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과제

토 론 문

유승희 (민주통합당 여성위원장/19대 민주통합당 서울 성북구 갑 당선자)



토 론 문

신계용 (새누리당 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전 청와대 행정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인물로의 교체, 여성의 정치참여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제18대 국회파행 운영은 새로운 정치 변화의 요구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은 개혁공천=여성공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 했다.

민주당 당규에 여성공천 15% 강제규정화, 새누리당의 30% 권장약속 등은 여성전략 공천의 의지가 확고해졌으며, 양당의 대표 모두 여성이었던 점 등은 시너지 효과까지 발휘하여 19대 공천은 여성공천이 대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결과는 우려했던대로 헛물이었다.

* 지역구 사례

안양만안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지역(현역 민주당 3선지역).

새누리당 후보 조건은 새로운 신진인물로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함.

1차발표시 경선지역으로 분류, 3명의 후보 경선 참여(본인포함)

공천결과 : 두 번이나 모두 패한 후보를 다시 공천함으로써 유권자 관심 반감

경선은 빗좋은 개살구

각 정당은 후보의 본선경쟁력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경선을 선택하기도 한

다. 그러나 경선이 갖는 공정성, 민주성, 상향식 등의 의미는 겉일 뿐이고 내부는 돈과 술수의 추함만 있을 뿐이다.

특히 여성후보의 경우에는 재정 및 조직문제의 열세로 인해 난관에 봉착된다.

새누리당은 경선지역에 전화여론조사와 현장 국민경선방법을 제안(민주통합당은 모바일경선도 포함)하면서, 편의상 전화여론조사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였다. 본인 지역선거구의 경우, 두 명의 후보는 각각 전화여론조사와 현장경선방법을 선호했다. 여성후보 입장에서는 어느 방법이든 모두 불리했다. 전화여론조사는 설문내용이 지지도이든 적합도이든 어차피 인지도 조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현장경선은 누가 유권자를 더 많이 현장까지 동원할 수 있느냐 조직(지역기반)과 돈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이다. 경비도 만만치 않다. 전화여론조사는 2700만원 정도, 현장경선은 8000만원을 후보자가 1/n씩 당에 지불하면서도 홍보물 및 현장 선거비용은 별도로 개인 부담이었다. 어느쪽도 유리하지 않았던 본인이 전화여론조사를 선택함으로써 전화여론조사 경선을 치르게 되었다.

전화여론조사는 2,000명이 집계될 때까지 집 전화로 직접 응대 조사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론조사 역시 조직선거이고 왜곡조사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투표경선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전에 조사시기가 알려지기 때문에 조직기반이 있는 후보는 착신전화 연결을 지인들에게 문자로 지시했고, 연령을 속여서 응답해달라는 주문이 가능했다(문자로 불법을 부추겼던 모 후보는 중도사퇴까지 했다).

또한 사전에 집전화번호를 많이 보유한 후보일수록 유리했고, 최근 독신가구나 젊은 계층은 집전화없이 무선 핸드폰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하게 여론을 반영한다는 것은 무리였다.

본선경쟁력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확한 여론의 반영이기 보다는 왜곡된 여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더우기 새누리당은 1차 공천발표전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

하여 공천기준으로 삼은 바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2차 경선과정에 여성을 포함시켜 전화여론조사를 반복하게 한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재정적 낭비, 정신적 혼돈만 야기한 결과를 낳았다. 일부에서는 경선에 여성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여성배려라는 주장도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조직과 돈에 열세인 여성이 본선경쟁력 없음을 부정확하고 왜곡된 방법을 동원하여 확인시키려는 구차스런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가산점제의 유명무실

각 정당은 여성이 경선과정에 참여시 특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득표수의 최대 20%부터 10%까지 부여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도의원을 지냈지만 본인은 10%를 배정받았고, 워낙 지역 인지도가 열세인 관계로 10% 가산점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한 허울뿐인 가산제도였다.

이번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가 장애인과 과학전문성, 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제도였다. 그러나 이 가산기준이 중복됨이 없이 한가지만 해당되게 되어 있었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중복가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여성공천 확대를 위한 소견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선가능지역에 여성 전략공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선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상당수의 여성들이 정치참여의 꿈을 키우고 있다. 불과 선거 1달전만 해도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리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정치는 예측 불가능하다. 변화무쌍하다. 당선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더더욱 변화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으로 하여금 일을 저지르도록 해 보는 전략도 필요했으리라.

지방의회선거에는 반드시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포함이 안될

경우 그 지역의 후보 추천 자체를 무효화 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도 여성공천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의 시.군.구가 3개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최소한 한명의 여성 후보가 포함되도록 다음 번 20대 국회에서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선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은 분명 많지만, 승리의 원동력은 결국 지역기반을 확대하는 활동만이 처방일 뿐이다. 지역별, 계층별, 직능별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진정성있는 활동만이 경쟁력을 갖춘 독특한 유일성을 확보한 후보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경선의 난관을 뚫을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재정의 문제는 당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보안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과제

토 론 문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제19대 총선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평가와 향후과제

토 론 문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성정치세력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언론의 몰이해와 무관심”

이은경 (여성신문사 편집위원)

1. 젠더적 표현 이슈화

-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여성15% 할당 강제화 조치...역대 총선 중 최초로 ‘젠더 관점’ 공식화///민주통합당 **남성후보들의 반대 기자회견 백래쉬 표면화**
 - * 서울 마포을 정청래 후보 “성전환 수술이라도 해야 하나” “여성 낙하산” “당이 이대 동문회인가?”, 486 이대 라인, 경기 고양 일산서구 김두수 후보 “환호하는 여성 후보 뒤에서 울고 있는 남성 후보의 심정을 아느냐?”
 - * 여성 후보의 현황은 백래쉬 일으키기엔 턱없이 초라한 성적: 선관위 등록 현황: 246개 지역구 927명 중 66명, 7.1%, 남성 후보 등록자의 13분의 1 수준
 - * 새누리당 230명 16명 ‘7%’/ 민주통합당 210명 중 21명 ‘10%’/ 자유선진당 52명 중 3명 ‘5.8%’/ 통합진보당 55명 중 8명 ‘14.5%’/ 진보신당 23명 중 4명 ‘17.4%’

역대 여성 후보 선관위 등록 현황: 17대 총선 1175명 중 66명 ‘5.6%’/ 18대 총선 1092명 중 132명 ‘11.8%’///18대 총선 당시 여야 지역구 공천 현황: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5명

- 성추행 후보 관련 발언

- * 국회 정론관 선글라스녀 등장, (부산 수영구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의 성추행 피해 주장하며) “다시는 권력을 이용해 여성을 희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 발언
- * 새누리당 탈당 김형태 당선자(경북 포항 남·울릉)의 제수 성추행 논란 관련 “나쁜 제수는 성추행해도 되나?” 발언 등

II. 여성정치세력화 관련 정치권 행태에 무관심

-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에 대한 “안 되면 말구” 식의 미온적 태도

- * 민주통합당의 경우, 막판에 “여성할당 15% 못 채우면 일정 비율에서 최고위원 회가 조정할 수 있다”는 ‘면피’ 단서조항 추가(여성 후보 부족 시 활용...45개 지역구 중 49명만 공천 신청, 15% 강제조항 채우려면 37,8명 공천, 경쟁 무의미)
- * 중앙선관위의 ‘반칙’에 대해 남성후보들의 백래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무관심(중앙선관위는 후보 등록마감 하루 전 공직선거법 57조2조항을 들어 “특정후보에게 가산점을 부여한 당내 경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탈락후보가 불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 여성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 과소평가 혹은 무관심: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정당 득표율보다 여성후보의 득표율이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서울 영등포구 갑 김영주 42.52% > 28.96%, 경기 고양시 일산구을 김현미 41.84% > 28.27%)
- * ‘여성공천’이 이번 4.11 총선 관련 각 당 주요 개혁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각당이 자신의 텃밭지역에 여성을 공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면죄부 줌(출마지역 불균형 심화로~/// 여성 후보 절반 이상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출사표(서울 19명 · 경기도 17명 · 인천 2명 등 총 38명))
- * 수적 강박증으로 지역구 돌림 현상 심화됐으나 역시 무관심(부산 중구 · 동구에 공천 신청했던 손숙미 의원은 경기 부천 원미읍로, 서울 용산에 공천 신청했던 배은희 의원은 수원(권선)로, 대구 달서구에 공천 신청했던 송영선 의원은 경기 남양주갑으로 최종 배치. 애초 공천 지역인 종로에 공천 희망했던 조운선 의원은 당의 전략지역 방침에 따라 의왕 · 과천 지역 등이 논의되자 출마 고사. 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서울 강남을 경선에서 정동영 상임고문에 패한 뒤 송파갑에 전략공천되자 정치적 명분이 없다며 후보 사퇴)

- 야권연대에 의한 여성희생 무언급

- * 민주통합당 3명(서울 은평을 고연호, 경기 안산 단원갑 백혜련, 경남 진주시을 서소연), 통합진보당 여성 출마자 총34명 중 26명 희생(용퇴 포함) 등 들러리 역할

- 女-女 대결 지역에 대한 말초적 관심과 무비판

- * 서울 도봉갑 새누리당 유경희 vs 민주통합당 인재근, 중랑갑 새누리당 김정 vs

민주통합당 서영교/ 경기 광명을 새누리당 전재희 vs 민주통합당 이언주, 고양 일산서구 새누리당 김영선 vs 민주통합당 김현미, 수원을(권선) 새누리 배은희 vs 무소속 정미경/ 전북 익산을 민주통합당 전정희 vs 무소속 조배숙 등

- * 총선 후 경기 광명을 당선자 민주통합당 이언주 후보에 대해 “‘광명여제’ 철옹성을 무너뜨리다” 보도 등

III. 젠더 정책·공약의 부족과 무관심

- 육아 보육 일자리 공약 등 각이 서지 않는 ‘착한 공약’에만 집중

- * 유일한 쟁점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부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반대, 자유선진당은 찬성, 새누리당은 사병월급 인상, 국가기술 자격 획득 시 군복무경력 인정 등의 실질적 보상책 제시

-비주류 공약의 여성문제 다양성과 전문성 부각되지 못함

- * 임신 출산 보육 ‘주류’에만 맴돌면서 실제적인 여성안전권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 공약,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공약, 낙태 등 재생산권에 대한 공약, 이주여성 관련 공약 등 실질적인 여성공약은 조명받지 못함

IV.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해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하나

- 여성 청년 등 비주류 대표성에 주목하고 이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새로운 공천 방식에 관심 가져야 한다: 유권자의 다양성과 다채로운 현실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첫 단추임을 인식하고 알려야 한다

- * 네덜란드의 당 지도부에 의한 충원 방식: 유권자와 후보자 구성 일치를 위해 성나이 직업상태 경험 등을 반영한 명부 작성하고 지도부가 조정, 당내 활동보다 이익집단에서의 전문적 활동 중시, 여성 청년층 진입 용이해짐
- * 북유럽 대부분의 정당들, 여성 후보 4,50% 포함된 명부 작성 준수

